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 시_ 2022년 8월 12일(금)~13일(토)

■ 장 소_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 주 최_ 한국경제학회

■ 후 원_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금융지주, 산업연구원, 미래에셋증권,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 시_ 2022년 8월 12일(금)~13일(토)
- 장 소_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 주 최_ 한국경제학회
- 후 원_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금융지주, 산업연구원, 미래에셋증권,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환경연구원

초대의 말씀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는 유례없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년반 이상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곡물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직면하여, 무역수지 악화 및 주식시장 침체 등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연금, 디지털 혁명, 에너지전환 등 중장기적 대응정책만 아니라 당장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도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학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을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현 국면을 돌파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4개 세션(환경과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 혁신성장과 금융정책)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종합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경제강연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외원조를 받는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국가입니다. 오일쇼크,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당면한 경제위기도 국민들의 단합과 집단지성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도 이러한 저력으로 충분히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공동조직위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프 로 그 램

8월 12일(금)

리셉션 및 등록 (13:00-13:45) 안티구아1 로비

개회식 (13:45-14:35) 안티구아1

• 사회 : 김덕파 사무국장 (고려대 교수)	
개 회 사	이 근 (공동조직위원장, 서울대 교수)
환 영 사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개막강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특별연설	정운찬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Plenary Session I : 환경과 에너지 정책 안티구아1

14:40-15:35	• 사회 : 김덕파 사무국장 (고려대 교수)
	• 좌 장 : 강성진 (고려대 교수)
	• 발 표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패 널 :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부원장)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정태용 (연세대 교수)

Plenary Session II : 산업정책 안티구아1

15:40-16:35	• 사회 : 어윤중 사무차장 (고려대 교수)
	• 좌 장 : 이 근 (서울대 교수)
	• 발 표 :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 패 널 : 김채광 (한국엔젤협회 부회장)
	정무섭 (동아대 교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체크인 (16:35-16:50) 안티구아1 로비

Plenary Session III : 통상정책

안티구아1

16:50-17:45	<div>• 사회 : 어윤중 사무차장 (고려대 교수)</div> <div>• 좌 장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div> <div>• 패 널 :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박지형 (서울대 교수)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 윤 (서강대 교수)</div>
-------------	--

Special Policy Session :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

안티구아1

17:50-18:45	<div>• 사회 : 조원기 사무차장 (고려대 교수)</div> <div>• 좌 장 : 신관호 (고려대 교수)</div> <div>• 기조연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div> <div>• 발 표 1 : 윤종원 (IBK기업은행 회장)</div> <div>• 발 표 2 :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div> <div>• 대표토론 :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div>
-------------	---

만 찬 (18:50-20:40)

안티구아2

<div>■ 만찬공연 (18:50-19:10) : 아르모니아 앙상블</div> <div>■ 주요 내빈소개</div>	<div>• 사회 : 조원기 사무차장 (고려대 교수)</div>
--	-------------------------------------

8월 13일(토)

Special Session :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역할
(한국고등교육재단-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안티구아1

09:00-10:10	• 사회 : 김영주 사무차장 (홍익대 교수)
	• 개회사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 좌 장 : 장용성 (서울대 교수) • 패 널 : 김대환 (건국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 이수형 (서울대 교수) 한종희 (연세대 교수)

Plenary Session IV : 신정부 출범 100일: 정책과제와 해법 안티구아1

10:15-11:30	• 사회 : 김영주 사무차장 (홍익대 교수)
	• 좌 장 :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 패 널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병완 (영남대 교수) 이영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정 혁 (서울대 교수)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폐회식 (11:30-11:40) 안티구아1

• 사회 : 김영주 사무차장 (홍익대 교수)	
폐 회 사	강성진 (공동조직위원장, 고려대 교수)

목 차

■ 개회식

환 영 사 : 이중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1
특별연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3

■ Plenary Session I :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발 표 : 새정부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과제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15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Plenary Session II : 산업정책

발 표 : 대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29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 Special Policy Session :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

기조연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9
발 표 1 : IBK기업은행: 국책은행 역할 평가 및 시사점	61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발 표 2 :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71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환 영 사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

오늘 한국경제학회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서 개막 강연을 해 주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특별연설을 맡아주신 정운찬 명예회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포럼의 주제는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국제 금리 인상, 세계 경기 하락 등 국제 환경의 불안과 인구 고령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 소득계층 간·지역 간 격차 확대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경제학계는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많지만,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면서 현실 경제엔 관심이 적다는 비판을 종종 받습니다. 경제이론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자주 받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정책 전문가와 학자들이 많이 참가하셔서 한국경제의 당면한 문제에 좋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경제학회에 뜻깊은 해입니다. 1952년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했던 학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학회는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정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회와 교류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는 10년 만에 한국경제학회가 하계에 정책포럼을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분야별 정책을 논의하고 내일은 종합토론과 한국의 경제학과 경제학자의 역할에 대한 특별 세션도 갖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오랜만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모였으니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원해 주신 후원 기관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비판과 제언 (특별연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I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천명하며 친기업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 취임(5월 10일)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기업인을 초청하고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중소기업인 대회까지 열었다. 그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5월 하순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잇달아 내놓았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5년간 30~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투자, 특히 설비투자 가뭄을 극복하려고 마련된 기업의 투자계획에 환호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케인즈가 역설했듯이 투자는 야성적 충동의 함수다. (Investment is a function of animal spirit.)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또 당시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갑자기 대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어온 이유가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 때문이었고 대기업은 첨단 핵심기술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 두 가지 애로가 아직도 기업투자를 옥죄고 있지 않은가?

사실 서민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기업 차원에서도 조 단위의 금액은 참으로 큰돈이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고 가정할 경우 그분들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왔다 해도 1조 원을 쓰려면 아직 멀었다. 1조 원도 이렇게 큰돈인데 10대 그룹 전체로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니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1년에 60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투자는 철저한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큰 그림을 보지 못하여 중복 과잉투자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1990년대 초중반에 경험했던 비효율적 투자 그리고 그 결

과로서 1997년 같은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리원칙을 먼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으나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규제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모두 다 악은 아니다. 환경규제도 그렇고 금융규제도 그렇다. 다만 꼭 필요한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담보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잘못했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규제 완화뿐 투자는 미미할지도 모른다.

이번 대기업들의 투자계획과 비슷한 의욕적인 투자계획은 과거 정권들에서도 있었다. 예를 들면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때도 대기업들은 5대 신산업에 160조 원을 투자하여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설사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한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잠시 눈을 돌려 지난 한 세대 동안 경제 현실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되돌아보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한국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문화와 연계되며, 국내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단절시켰다. 그 결과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철학이다. 인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국가 사이를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은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독식의 경쟁을 지양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동반성장이 주장하는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성장’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성과에 비례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분배의 규칙을 보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견제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해다.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이익 극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약한 이익의 팔을 비틀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승자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에서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특정 계층의 눈물과 희생 위에서 누리는 일부 계층

의 만족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동반성장의 요체는 바로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 부문의 성장 효과가 서민·중소기업·신생산업 등으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 또는 trickle-down effect)다.

기업 활동에서의 불법과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 증대는 거꾸로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끊어진 낙수효과를 복원하고 미약한 분수효과를 확충함으로써 부문 간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경제의 순환 고리는 왜곡되었다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1998~2017년 동안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했다.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보다 기업소득의 증가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2017년 기간 중 가계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기업소득은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소득은 주로 대기업의 몫이고,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2010

년 대기업 6.4% 중소기업 2.4% , 2011년 대기업 4.6% 중소기업 2.2%로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½도 안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7년 대기업 7.8% 중소기업 3.6%, 2018년 대기업 6.8% 중소기업 3.1%, 2021년 대기업 9.3% 중소기업 5.5%와 같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갑을 관계에서 우위를 갖는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 규칙으로 인해 대기업에 흘러갈 자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기적 실천 방안의 한 예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들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중의 일정부분을 임직원의 인센티브(보너스, 스톡옵션 등)로 사용하듯이, 다른 일부를 협력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고용 안정, 해외 진출 등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쓰도록 사전에 자율협약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협력업체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 이들의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 혁신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으로 흐를 자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낙수효과를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5% 내외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다.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된 제도다. 그 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판매수입공유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수익공유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NFL은 1970년대부터 TV 중계권 계약을 리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기장 입장 수익을 재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시즌NFL 구단의 총수익 중 평균 리그 분배수익 비율은 약 62%에 달했다. 수익공유로 모든 구단의 전력이 동반 상승하자 매 경기가 치열한 승부로 진행되었고, 이런 역동성이 관중을 불러 모아 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며 리그·구단·선수가 모두 성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두 번째 단기 실천 방안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보다 국제 경쟁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많은 법적·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그들은 기업보국·기술보국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절박성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하나의 방안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단기 실천 방안으로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도 대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수주한 후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결과 일은 하청 중소기업이 다 하고 대부분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간다. 중소기업이 자본·인력·기술을 축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충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20억 원까지이나 앞으로는 적어도 50억 원, 그리고 후에는 더 큰 금액까지 적용해야 한다.

II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아쉬운 점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프리드먼 교수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의 신봉자로 보인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의사결정과 다른 정치적이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인 정책개입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경제적 선택은 윤리적 행동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해 최근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시카고 대학의 스티글러 센터(Stigler Center)는 「프리드먼의 원칙, 50년 후」라는 발간물을 통해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않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부정적 외부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완전한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은 아담 스미스 이래로 강조되어 왔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과 사실상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서 경제와 사회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virtue), 즉 현려, 정의, 인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 prudence)’의 덕은 자신의 건강, 재산, 평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정의(正義, justice)’의 덕은 공정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의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혜(仁惠, beneficence)’의 덕은 타인의 필요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랑과 애정의 연대 (agreeable bands of love and affection)에 의해 실현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 본성(human nature)은 ‘현려’의 덕으로 발현되는 ‘자기애(self-love)’ 뿐 아니라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존재한다. 이 마음속의 공정한 존재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한다. 스미스는 정부가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위임받아 독점, 매점매석,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정의’는 경제사회의 기둥이며 ‘인혜’는 그 지붕이다.

『국부론』은 독점이 국가의 적이라고 지적한다. 독점은 자유를 침해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치므로 국가는 독점을 금지해야 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자유는 외부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는 사회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30여 차례 언급됐지만,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물론 자유는 좋은 가치다. 윤 대통령이 자유를 것처럼 반복하여 강조한 것에 대해 그 자체로서는 비판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만이라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그의 『자유론』에서 밝혔듯이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의 기본원리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어린애처럼 또는 미친 사람인 양 제멋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자가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틀 속에서, 누구든 최대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밀의 자유론의 기본정신이다.

밀이 말하는 자유를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윤 대통령이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줄여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유만 허락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며 그런 사회는 자유가 제대로 구현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무한한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경제적 강자들은 경제적 약자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대로 윤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려 하여도 대기업들에게 하청기업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공정 행위는 하청기업들이 정당하게 노력할 성과를 빼앗아 감으로써 하청기업 임직원들의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원청 기업들에게 그렇게 할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천착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평등의 원리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가 있으면 평등은 없어지는가?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지는가? 자유가 충만한 사회에서 평등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가? 이는 조화의 문제이지 양자택일(兩者擇一)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만을 30회 이상 언급하고 평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만에 하나 “자유는 선이고 평등은 악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된다”는 믿음 때문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의 발로(發露)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 정부가 경쟁의 자유, 이익 극대화의 자유만을 강조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의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평등은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고? 방법은 바로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은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넓다. 주택문제를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공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다.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적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소수의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등이 좋은 일자리이고, 나머지 80% 이상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이다. 장벽을 낮추고, 장벽 안과 밖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 역시 세대 간 상생, 동반성장의 방식으로 풀면 된다. 예를 들면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 자금을 청년들의 창업이나 역량 강화에 투자하면 청년들의 소득이 늘면서 노인복지 자금을 위한 재원도 풍부해질 것이다.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진 것이다. 기득권자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후발주자는 장벽을 넘지 못한다. 결국 강자와 약자가 대등한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와 위험한 코인 투기 등으로 내몰린 젊은이들도 많다. 시장에 돈이 많아도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크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대안은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동반성장 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분배 없는 성장은 없다. 성장 없는 분배는 없듯이 말이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분배가 잘된 나라가 성장도 활발했음을 안다. 동반성장 없이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III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 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 구성에 대해 한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라는 게 세간의 평이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너무 많고, 경력으로는 검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영남 일색이고, 나이와 성별로는 60대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한국경제의 주된 과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양성이 창의성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

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창의성이 꽃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지역 균형을 넘어 계층 균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이미 길러낸 인재들은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포진시켜야 한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인적 구성의 중요성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 삼성과 해체된 대우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대우는 좁은 인력풀(주로SKY대학)에서 인재를 구했지만, 삼성은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인력풀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렇게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었듯이, 국가도 인력풀을 다양화해야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모을 수 있고, 이를 정책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현 정부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최고의 인재들(The Best and the Brightest)』이다. 존 F. 케네디 시절 인사정책에 대해 쓴 책인데, 주로 하버드(케네디 대통령 형제) · 예일(번디 특별보좌관 형제) · 프린스턴(공산권 ‘봉쇄정책’으로 유명한 케난) 출신의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책, 특히 외교정책은 쿠바의 피그만 침공이나 무리한 월남전 개입 등 형편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이 책은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신뢰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을 극복하자면 첫째는 정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는 인재풀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기술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관심 범위와 문제 해결 방향에도 크게 의존한다. 특정 집단에 편향된 정부 구성은 몇 가지 제한된 사안의 전문적 해결에서는 부분적으로 강점을 보일지 몰라도, 국정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커다란 제약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의 복권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Plenary Session I :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발 표]

새정부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과제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2022. 8. 12.

이 창 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새정부 환경과 에너지정책의 과제

- 기후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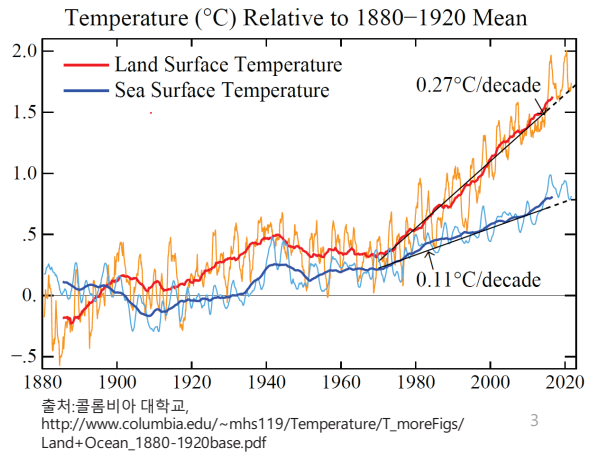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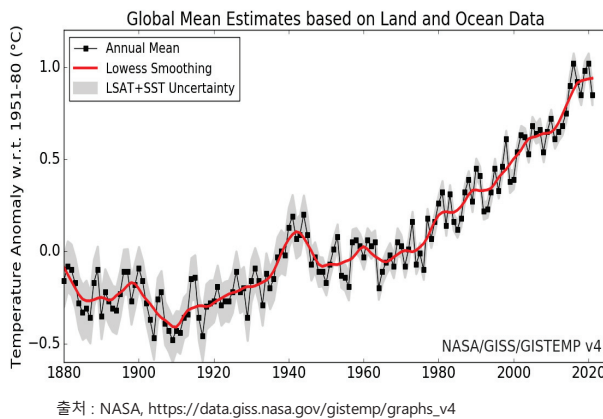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Contents

1. 정책 여건 : 기후 및 에너지위기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3. 핵심 추진과제

1. 정책여건 : 기후위기와 대응

2020 : 근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산업화 이전 대비(1880-1920년 평균) 1.29°C 상승
 2014~2021 :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8년



1. 정책여건 : 기후위기와 대응



미국 텍사스 한파 (2021)

- 겨울평균기온 10°C인 미국 텍사스 영하 18°C 북극발 한파
- 470만 가구 전기 및 난방 중단, 1,400만명 수도 공급 중단
- 210명 인명피해
- 230억 달러 피해(보험지급액)/ 최대 2,000억달러 이상 피해



서유럽 대홍수 (2021)

-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서유럽 지역 100년만의 홍수 발생
- 독일 20만 가구 전기 공급 중단
- 240명 이상 인명피해
- 430억 달러 피해



호주 울진 산불 (2019/20, 2022)

- 2019년 호주,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남반면적 이상 산불 다발적 발생
- 국내에서도 최근 울진 및 삼척 이례 적인 가뭄으로 역대 최장 기간 산불 발생, 여의도 면적 72 배의 임야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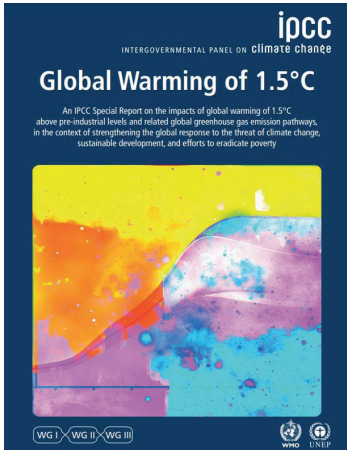
국내 꿀벌 개체 급감 (2022)

-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 70억 마리 감소(전국 개체수의 172%)
- 농작물 작황 영향으로 농작물 가격 상승
- 수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전세계 연간 165조 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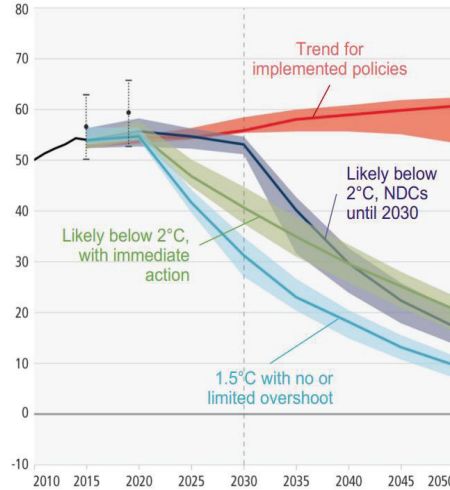
출처 : Christian Aid, 2021, Counting the cost 2021 : A year of climate breakdown.

1. 정책여건 : 기후위기와 대응

2050 탄소중립은
1.5°C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IPCC 1.5도 보고서, 2018)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1.5°C 목표달성 불가능
(IPCC 6차 평가보고서, 2021)



정책시나리오별 온난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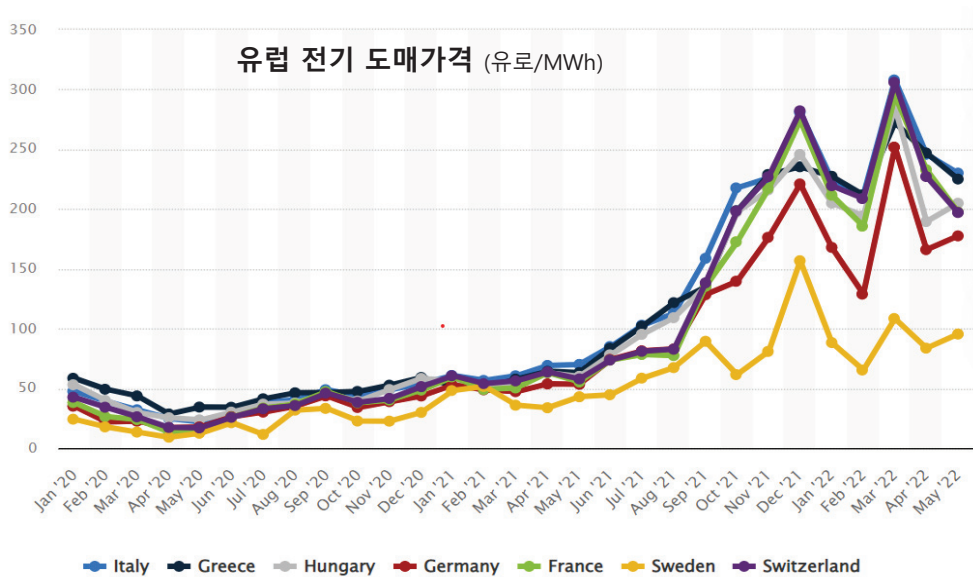
- '20년말까지 채택된 정책을 유지'
→ 3.2°C 상승
- COP26('21) 이전 발표된 NDC와 탄소중립목표를 이행하는 경우
→ 2.8°C 상승

기후목표별 온실가스 감축률
(2019년 대비)

- 1.5°C : 43%(30), '50년대 초 탄소중립
- 2.0°C : 27%(30), '70년대 초 탄소중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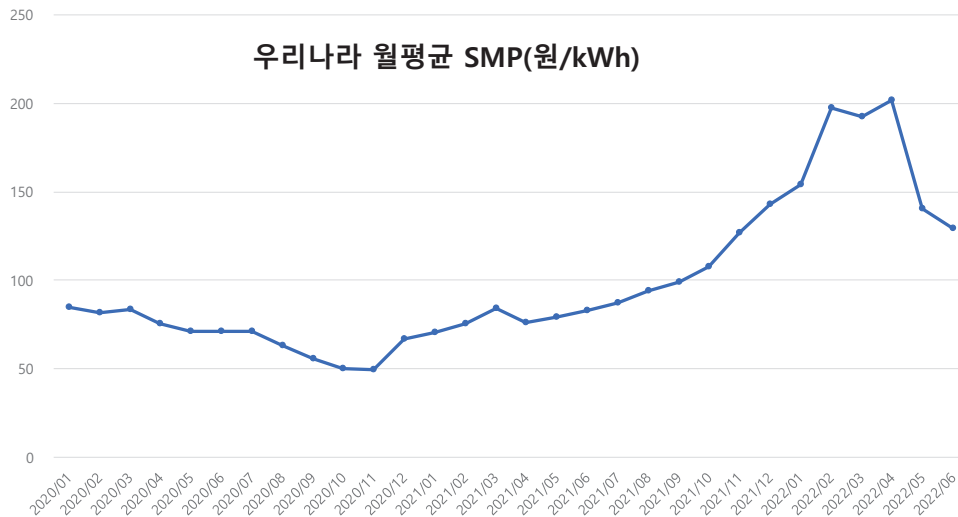
1. 정책여건 : 에너지위기



출처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67500/eu-monthly-wholesale-electricity-price-country/>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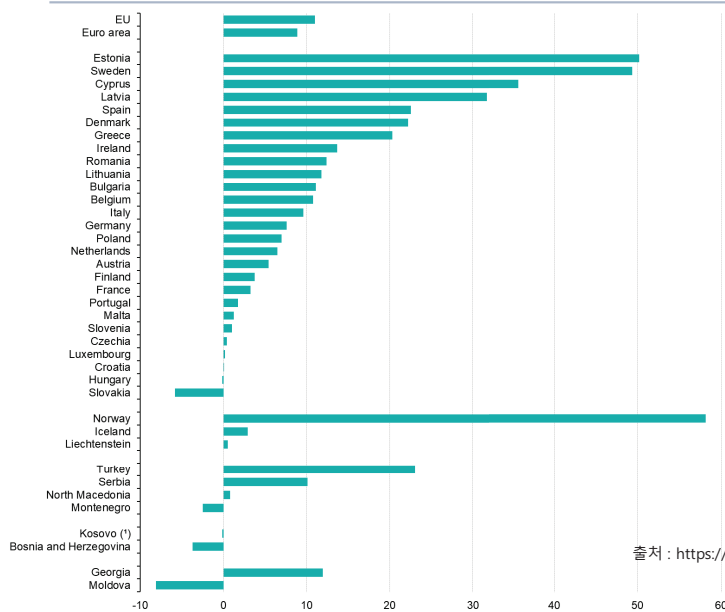
1. 정책여건 : 에너지위기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력거래/계통한계가격/가중평균SMP, 육지-제주 통합가격

7

1. 정책여건 : 에너지위기



EU 22년 상반기
전력소매가격 증감률
(vs.21년 상반기 소매가격)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연동정도는 국가별 차이
- 소매가격에서 도매가격의 비중
- 물가정책적 고려

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lectricity_price_statistics

8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목표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경제운영 4대 기조

- 자유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영
- 공정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 혁신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미래대비 기반 확충
- 연대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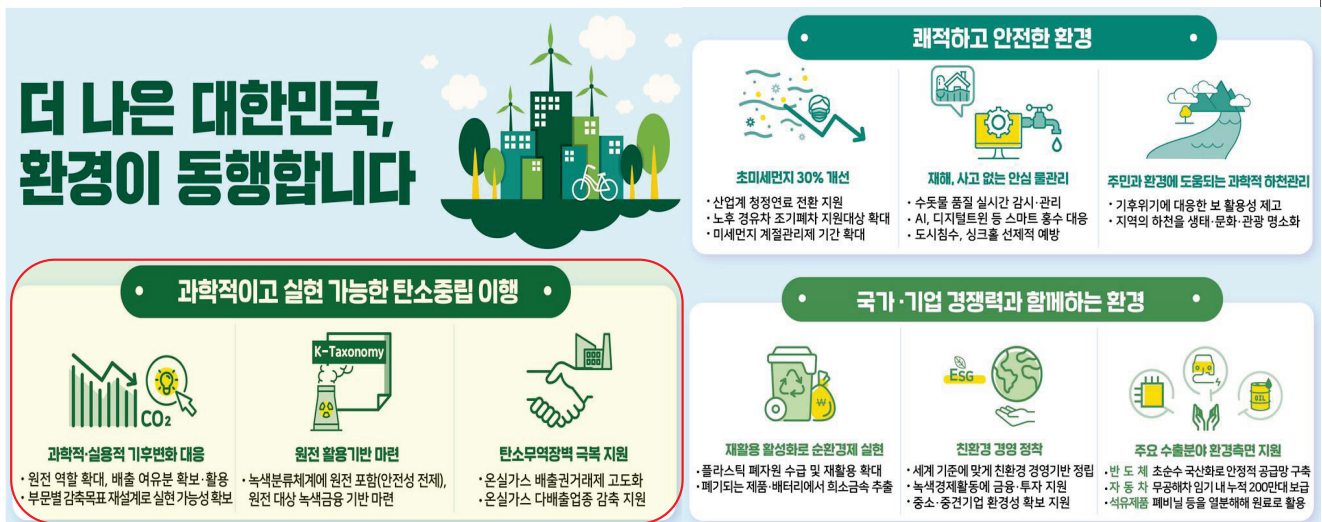
자유로운 시장경제

- 경제운동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환경정책방향(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2.7.18)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기후정책방향(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2.7.18)

2030년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과 연계,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 온실가스 최대한 감축
- 확보된 배출여유분은 산업 및 민생부문(건물, 폐기물)에 안배
-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 도출 → '23.3 국가계획에 반영

원전 활용기반 마련(녹색분류체계)

-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 녹색투자 유인
- 관계부처 협의(~7월)
 - 초안발표(7월말~8월초)
 - 추가 의견수렴 후 확정(9월~)
-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
 -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탄소 무역장벽 극복 지원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유상할당(현 최대10%) 확대 무상할당 시 벤치마크 방식 확대 (현 66% → 75% 이상)
- 기업의 적응을 위해 제4차 할당 기간('26~)부터 시행
-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감축활동 지원에 활용

11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관계부처합동, 2022.7.5)

비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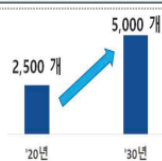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5대 정책 방향

- 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②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③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④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 ⑤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12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1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p>원전비중 '30년 30%이상으로 확대 (현 NDC : 2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울 3,4호기 건설 :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 재개 ■ 수명도래 원전 10기 계속운전 :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안보·전력수급 ■ 방폐물 관리 :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마련 및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 마련 	<p>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을 감안, 합리적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조정 (현 NDC : 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여건(계통운영 등)을 고려, 재생e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 적극적으로 활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e 원별 비중 마련 예정 	<p>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과 미래형 전력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 ■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 전원 믹스 변화(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 ■ 재생e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	---	--

13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p>3대 부분 수요효율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 (가정·건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수송)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 - 전기차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의 연비제도 도입 	<p>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시장)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도매시장 : 계약시장개설,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도입, 가격입찰제/양방향입찰제로 전환 - 소매시장 : 독점구조 점진 해소 ■ (전기요금)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p>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전력시장·요금 관련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제고 ■ (전문성) 전기위원회의 계통감독,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 인력 보강
--	--	--

14

2. 새정부 기후에너지정책방향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4 -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산업화 및 유망기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생태계) 일감 조기 창출, 수출 역량과 공급망 혁신 ▪ (원전수출) '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 ▪ (SMR) 약 4,000억원을 투입하여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30년대 수출시장 진입 추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수전해②연료전지③수소선박④수소차⑤수소터빈 핵심기술개발 ▪ 금융/세제 지원 및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태양광/풍력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기술 조기상용화 및 터빈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 ▪ 전주기 기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BIPV, 해상풍력O&M 등 신시장개척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에너지혁신 벤처 육성 및 에너지 新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 대응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 VPP, 차세대ESS,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섹터커플링 등 전력新산업 발굴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및 민간 주도의 국제감축사업 지원 ▪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활용 체계 구축 및 RE100 참여 활성화
--	---	---

15

3. 핵심 추진과제

시장규칙의 재설계 : 배출권시장의 고도화

제도의 예측 가능성 강화

- 국가감축목표에 상응하는 배출권 허용총량 사전 확정 (이행연도별 선형감축 원칙)
- 유상할당, 특히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
- BM방식 무상할당 확대 및 개선(평균배출효율 → 상위10% 배출효율), BM계수 감소를 적용
- 전력화 시대 간접배출 관리방안 마련
 - 간접배출 제외기준 (유상할당비율/환경급전 + 전력시장 개편) 및 일정 마련
- 탄소가격 연계방안(Non-ETS 영역의 유류세/탄소세 vs. 배출권가격)

규칙 기반의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 정부의 시장개입 기준 및 내용의 명문화 (현재는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안정화조치시행)
- 유연성을 제한하여 배출권가격 급등락을 야기하는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 개선
 - 장기적으로 이월제한 폐지
- 예비분 계정 신설 :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예비분으로 지정하여, 특정 가격 도달 시 공급
- 예고시간제 도입 : 불가피한 운영변경 시, 사전 예고 등 할당업체들이 대응할 시간 제공

16

3. 핵심 추진과제

시장규칙의 재설계 : 전력시장의 정상화

도매시장의 시장기능 도입

- **현행 전력 도매시장**은 하루 전 변동비 반영 현물시장으로, 가격이 실제 전력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의 출력 불확실성과 실시간변동성 수용에 한계
- **입찰시장의 세분화** : 계약시장, 당일시장,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
- **비용입찰(CBP)에서 가격입찰(PBP)로 전환**
- **양방향입찰** : 판매시장 개방과 함께 입찰시장의 전환

소매경쟁체제의 도입과 전기요금의 탈정치화

- **소매시장 진입규제 폐지** : 경쟁체제 도입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소비자선택권 강화
- **전기요금의 정상화** : 단기적으로 도·소매요금 연동제를 일관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은 소매경쟁시장에서 결정하되, 규제위원회가 심사
- **독립적 규제위원회** : (정부로부터) 독립적 규제위원회가 전력시장 및 산업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및 시장감독기능 수행

17

3. 핵심 추진과제

갈등관리 : 발전 및 송전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원전 국민수용성 확보("가치갈등")

- **안전성 확보가 원전 안정적 이용의 전제조건**
 -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수명연한 만료원전의 수명연장 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
- **지역주민 및 국민과 risk communication 강화**
 - 원전의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개 및 소통노력 필요

송전시설의 주민수용성 확보("이해갈등")

- **적극적 회피방안**(수요이전, 발전단 ESS 등)과 함께 경유지 인근지역 주민 보상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 ("이해갈등")

- **태양광**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건설 지원
 - 영농형태양광 등 주민주도형 태양광사업 지원 (기준가격제도 도입 또는 REC 추가지급)
 - 토지이용규제, 이격거리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는 우선 개선
- **해상풍력** : 정부주도형 계획입지제도 도입
 - 정부가 입지와 인프라를 책임지고, 공개경쟁을 통해 발전사업자 선정
 -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최소화
 - 어민들의 참여 및 보상방안 마련

18

Plenary Session II :

산업정책

[발 표]

대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2022. 8. 12.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대전환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KIET 산업연구원

목 차

- I 산업 부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참고〉 새 정부의 산업정책



KIET 산업연구원

I

산업 부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KIET 산업연구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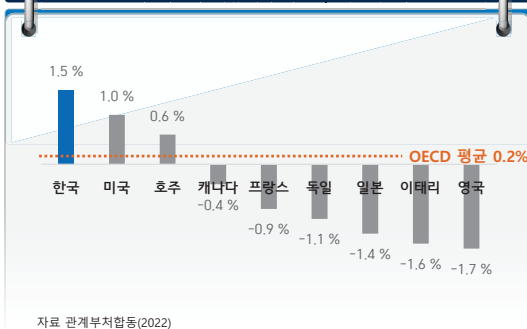
산업 부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지난 2~3년 간 위기 상황에서 **제조업 수출의 견고한 힘**으로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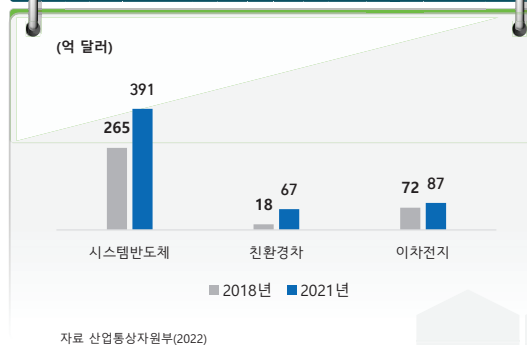
✓ **강한 제조업 힘으로 주요국 중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

- '20년 $\Delta 1.0\%$ (OECD 평균 $\Delta 4.5\%$) → '20년~'21년 **평균 성장률 1.5%** (G20 중 가장 빠른 속도)
- **역대 최고 수출 기록 경신** ('21년 6,400억 달러)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견조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배터리 등 **신유망품목** 수출 호조

주요국의 2020년-2021년 평균 성장률



新유망품목 수출 추이 (2018→2021)



KIET 산업연구원

I 산업 부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2 하반기 둔화 예상 → 경쟁력 문제가 아닌 만큼 경기 회복시 조기 회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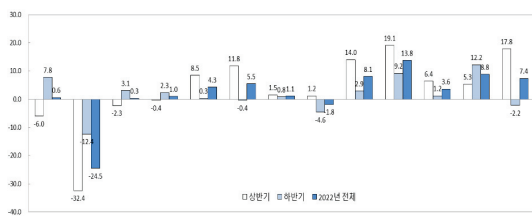
✓ 러-우 전쟁, 공급망 병목,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에 직면

- 다만, 대내외 악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

✓ 제조 펀더멘털 및 우리 산업 대응 수준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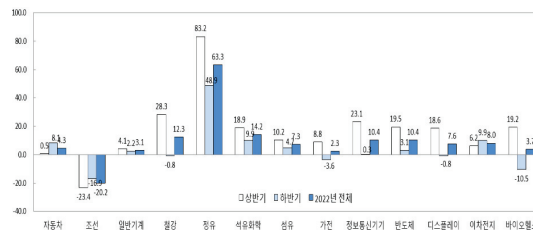
- 공급망 이슈 대응에 우리 산업이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응 역량을 보이면서 **K-공급망** 신뢰도가 크게 제고
- 단기적 경쟁력 문제가 아닌 만큼, Reopening 시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생산 전망



자료: 산업연구원(2022)
주: 전년동기비 증가율(%)

2022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 전망



KIET 산업연구원

I 산업 부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3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은 단·중기적으로 우리에게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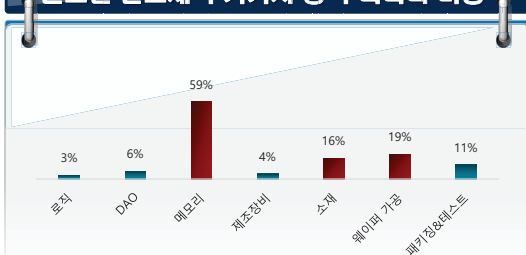
✓ 밸류체인 내 가장 핵심적 포지션 → 우리 산업의 전략적 가치 제고

- 시스템반도체 진출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으며,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北美 배터리 시장을 독점적으로 선점

✓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견제는 우리와 중국 간 초격차 유지·확대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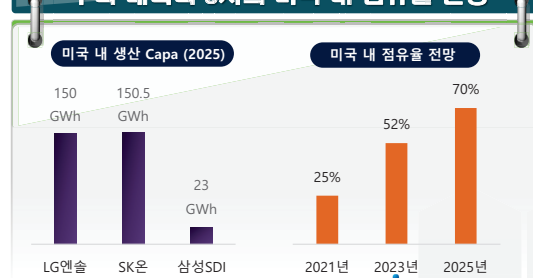
- 반도체(SMIC), 5G 장비(화웨이), 바이오(우시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는 우리 산업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초격차를 유지·확대하며 앞서 나갈 계기를 제공

글로벌 반도체 부가가치 중 우리나라 비중



자료: SIA(2021)
주: D/A/O = Discrete, Analog and Optoelectronics

우리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점유율 전망



자료: 키움증권

KIET 산업연구원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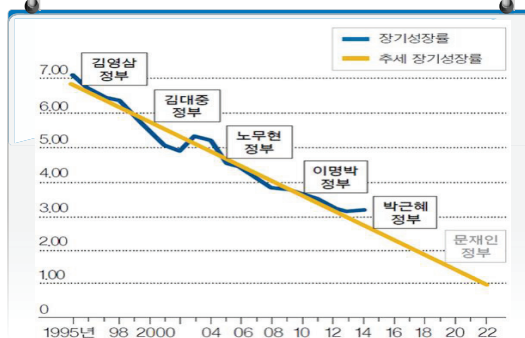
1 고착화 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낮은 생산성

✓ 장기성장률 5년 1% 하락의 법칙이 예외없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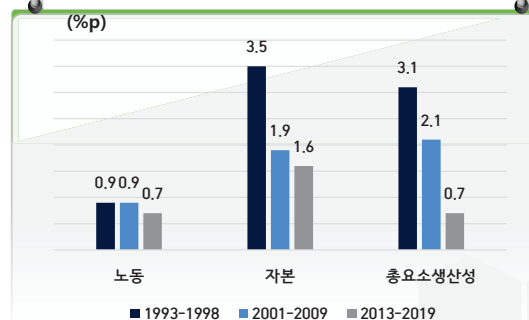
- 1990년 초반까지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 7%대 성장
→ 외환위기 이후 5년마다 1%씩 하락하는 추세 반복

✓ 요소 투입 성장 방식 한계에 봉착, 생산성 향상도 지속적으로 둔화

5년 1% 하락의 법칙



생산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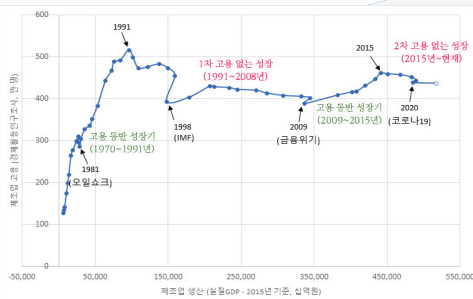
2 좋은 일자리와 핵심 인재 동시 부족

✓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새로운 고용 원천인 신산업 창출 지체

- 최근 10년 간 10대 수출 주력 품목은 사실상 동일 ('20년 바이오는 진단키트 특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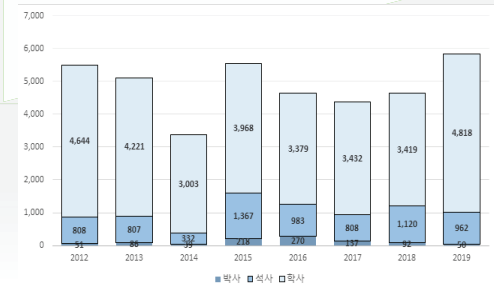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 증가가 더딘 가운데, 주력산업·신산업 고급 인력난은 오히려 심화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자료: 김은선 외(2019)

10대 주력산업 학사 이상 부족인원



자료: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2~2019)

KIET 산업연구원

- 9 -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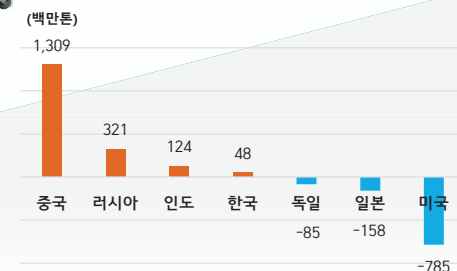
3 GX·DX 본격화 → 우리 제조업의 미래 생존이 걸린 중대 도전

✓ NDC 상향, 탄소국경조정, 공급망 실사 등 급격한 변화 직면

-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디지털 역량과 제조업의 탄소집약적 구조
→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높은 전환 리스크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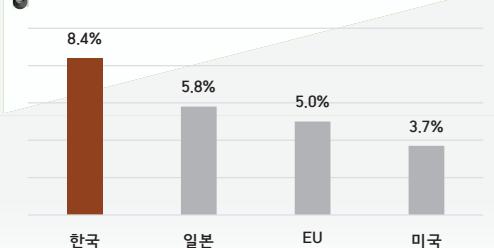
✓ 전환 과정에서 주변국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지켜내는 게 관건

국가별 교역 내재 CO2 배출량



자료: OECD(2020)

제조업 내 탄소배출 업종 비중



제조업 비중 : 한국 (28.4%), 일본 (20.3%), EU (16.4%), 미국 (11.0%)

자료: 관세부처합동 (2021)

주: 탄소배출업종은 철강, 유화, 시멘트, 정유

KIET 산업연구원

- 10 -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4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 자산화 → 글로벌 경쟁 격화

✓ 주요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에 총력 대응

- WTO 상계를 벗어나는 국가 보조금 및 조세 지원이 국가 간에 경쟁적으로 진행 → 산업정책의 무한 경쟁시대 돌입

✓ 글로벌 핵심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 환경 악화

- 2025년을 전후로 투자에 따른 양산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내용

대상국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상·하원 반도체·과학법 통과 (21.7) → 對중국 견제 및 반도체·전략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불 투입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21.5) 반도체 등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7,740억엔 추정 편성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컴팩스(21.3) → 디지털전환에 약 180조원 투자 EU CHIPS Act 제정 추진 → EU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430억 유로 투자 계획

자료: 언론기사 종합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동향

원인	주요 내용
TS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애리조나 360억불 (2030년까지 신규 팹 6곳 신설) 日 구마모토 70억불 투자
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애리조나 200억불, 오하이오 1,000억불(10년간) 유럽에 10년간 800억불 이스라엘에 신규 팹 건설 (100억불)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텍사스(테일러) 170억불 오스틴, 팹텍, 화성에 EUV 투자 확대
마이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10년간 1,500억불 투자 日 히로시마에 D램 공장 신축

자료: 언론기사 종합

KIET 산업연구원

- 11 -

II

수면 아래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

5 (종합 진단) 높아진 현안 대응력, 그러나 근본적 문제와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

✓ 현안에 적시 대응 → 위기 대응력 제고

- 위기대처 역량과 경험 축적 → 복합 현안에 대한 범정부 기구 운영 경험, 신속한 추경과 집행, 후속 입법화 등 위기 극복의 경험을 축적
-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 BIG 3,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법적 지원 근거(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수소법 등)를 확보

✓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는 근본적·구조적 문제는 여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의 성장 잠재력 및 생산성 제고,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 전환(디지털·그린), 경제안보화 흐름 등 대응에 한계

산업 대전환에 따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판짜기 진행 → 국가 핵심역량 집약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국가 간 경쟁시대 대응 필요



KIET 산업연구원

- 12 -

Ⅲ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Ⅲ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산업 대전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혁신역량 집약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시대 선도

추진 방향

1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2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

3

경제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 통합 전략 추진

4

민·관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산업 전략 플랫폼 구축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1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 데이터 기반의 제조업 디지털 생태계 강화

- 산업별·유형별 DX 성공사례 발굴 보급 및 민·관 참여 DX 표준화 협력 사례 구축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운용 효율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유통·보안 등 기반을 조성

✓ 디지털 플랫폼 역량 확보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중소기업 특화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개발·확산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을 촉진
- R&D 투자 조세특례 범위를 DX 분야로 확대하고, 대·중·소 기업 간 디지털전환 대응 공동연구에 공제율을 상향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1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하고, 인센티브 기반의 지원 메커니즘 도입

- 산업 부문 탈탄소 구조 전환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탄소중립산업전환위”) 및 조직(산업부 내 산업전환국) 구축
- 탄소차액계약제도(탄소회피비용과 시장 탄소가격 차이의 보전) 및 녹색제품 구매 쿠퍼터 도입으로 민간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경감

✓ 탄소중립 전환 新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 무공해·저탄소 수송기기 및 배터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 새로운 에너지 및 저탄소 관련 소부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재제조, 업사이클, 리사이클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2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

✓ 창업-성장-재도전이 원활한 벤처 혁신 생태계 구축

- 기업發 스피노프 창업 촉진을 위해 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 대상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출연·대학 등에서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
- 민간벤처캐피탈이 전문화된 위험 수용적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지원과 함께, M&A 및 성실실패 재도전 발굴 지원으로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

✓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협력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수요 촉진에 초점을 맞춘 대·중소기업 간 협력 R&D를 지렛대로 우리 산업 밸류체인 경쟁력을 제고
- 최적의 매칭 파트너 발굴을 위한 사전 탐색 및 신뢰 구축의 장을 활성화하고, 성과 배분 등 파트너 간 명확하고 공정한 협력 규율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7 -

KIET 산업연구원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2

혁신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기업 생태계 조성

✓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집중 양성

- 글로벌 M&A, 전략적 제휴, 글로벌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 중견기업을 대거 양성
-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 공유에 기초한 스마트제조혁신으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

✓ 코로나 극복을 넘어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성장 기반을 조성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전환 단계 맞춤형 지원으로 온라인·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확산
- 소상공인에 실효적 고용보험을 설계·도입하여 성실실패자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생력있는 소상공인 확산을 위해 맞춤형 재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

- 18 -

KIET 산업연구원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3

경제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 통합 전략 추진

✓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 주요국 수준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전략 및 수준을 고도화
 - ❖ 미국 반도체·과학법 상·하원 통과(7.27 및 7.28) → 전략산업 역량 제고에 2,800억불 수준의 지원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520억불, 설비투자 세액공제 25% 등)
- 우리 핵심전략산업 공급망 파트너 국가와 상호 리스크 완화 및 경쟁우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 소부장 정책 고도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전략화

-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수단을 확보
-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 분석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산업·제품별 경쟁력 상시 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략 수립 및 업데이트에 활용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3

경제안보 시대 대응을 위한 산업-통상 통합 전략 추진

✓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상황을 토대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

- 우리 산업의 디지털 밸류체인 경쟁력을 고려한 분야별·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
- 우리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IPEF 참여국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제안

✓ 산업·기술·시장의 지렛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가치사슬을 구축

- 국내 산업 전략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산업+통상 간 긴밀한 통합정책을 수립·추진
- 국내 생산교역과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해 핵심 전략물자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통상 전략과 연계하여 핵심 전략물자별로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4

민·관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산업 전략 플랫폼 구축

✓ 기업과 정부의 담대한 협력(K-Deal)으로 국가 혁신역량 집약

- 정부와 기업이 상호 책무 (정부는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를 다할 수 있는 과감한 Deal 추진
- 선제적 규제 개선 로드맵 마련과 이에 따른 선제적 입법 및 가이드라인 등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촉진

✓ 규제의 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사후적 규제 조정체계 마련

-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규제 심사 단계에서 규제 도입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 판단 요건 중 하나로 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를 신설하고, 운영 실효화를 위한 후속 운영체계 및 제도를 구비

II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4

민·관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산업 전략 플랫폼 구축

✓ 정부와 민간 간 역할 재정립과 현안 공동 대처를 위한 체계 구축

- 작동 가능한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예산·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 산업전략의 공동 수립·운용을 위한 파트너십 정립
- 정부와 민간 간의 긴밀한 정보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산업전략 수립·운용을 위한 핵심 정보자산을 확보·구축

✓ 미션지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경제안보, 산업규제 등의 전략조정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국가산업전략위원회" 신설·운용 (사례: 美 연방 제조업산업혁신전략조정위원회, 美 혁신경쟁법 中)
- 국가 산업전략 수립·추진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 생산을 위한 "산업정보전략분석원" 설치 → 제한된 접근, 제한된 유통을 전제로 고도의 산업·기술정보 융합분석 역량을 갖춘 국가산업전략 think tank 지정·설치

참고

· 새 정부의 산업정책

산업 부문 국정과제 (1)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 부문 국정과제 (2)

약속 4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 핵심과제 신속 해결
-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세르파를 구성, 규제영향평가항목 등에 산업 경쟁력 영향 반영
-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및 저탄소 R&D 세제지원 강화
- ✓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 '산업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
- ✓ **수요 지향형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목표지향형, 선도형 산업기술 Mega Project 추진



산업 부문 국정과제 (3)

약속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전용 R&D 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다배출산업집적지역의 정의로운 低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 마련으로 경제안보 확보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신속 인허가 처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 본격 가동
 - 인재 양성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백신, 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 팬데믹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2022.07.12)

산업 대전환을 이끄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 ✓ 규제 혁파로 투자 기반 규제 개선
- ✓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외투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유인 확대
- ✓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우선 조정 등 입지 지원 강화

혁신시스템 고도화

- ✓ 파괴적·도전적 기술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5년간 10건)
- ✓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부처별 R&D 및 사업화 수단 연계)
- ✓ 산업디지털융합아카데미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10개 이상 지정

성장사다리 복원

- ✓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 등 기업성장 역행적 제도개편
- ✓ 중견기업 투자펀드(4,000억원) 조성 등 중견기업을 산업생태계 핵심 고리로 육성
- ✓ 디지털협업공장을 구축하고 탄소배출업종의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미래 산업 구조에 맞게 고도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 ✓ 민간의 신속·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
-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강화

구원

- 27 -

2022년 세제개편안: 산업 부문(2022.07.21)

기업경쟁력 제고

-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최고세율 25% → 22% 인하)
-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투자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 즉 6→8%)
-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

- ✓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대상기업 매출액 0.4→1조원 미만으로 확대, 기업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최대 500→1,000억원으로 상향)
-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최대 100→1,000억원으로 확대)
-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 폐지)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3년 연장)
-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지역 균형 발전강화

-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KIET 산업연구원

- 28 -

감사합니다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Special Policy Session :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

[기 조 연 설]

새 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

2022. 8. 12.

김 소 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새 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Table of Contents

1.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정책 추진방향
2. 위기 선제대응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4. 기타 국정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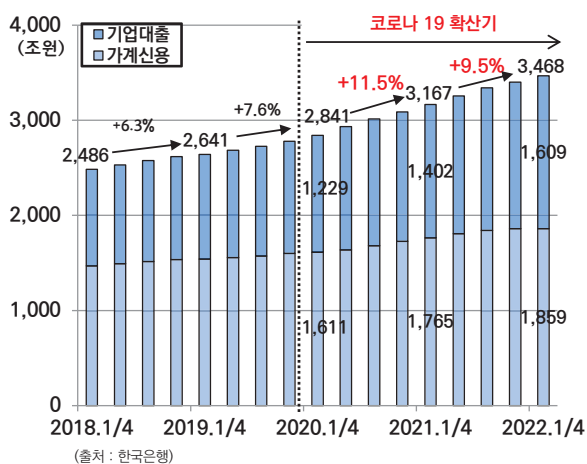
1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정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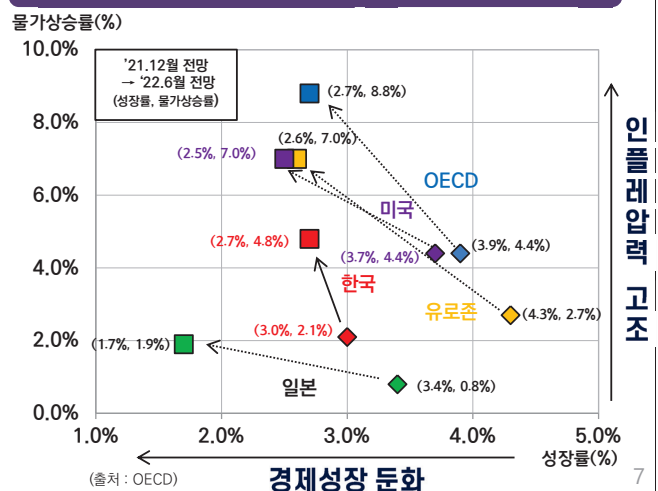
1-1. 금융시장 여건

코로나19로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코로나 전후 가계·기업대출 추이



'22년 주요국 성장·물가 전망 (OECD, '21.12→'22.6)



1-1. 금융시장 여건

글로벌 통화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리상승, 환율상승, 자산가격 조정

코스피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7

1-1. 금융시장 여건

3高 (물가, 금리, 환율), GVC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복합위기 가능성

주요국 CPI 추이



(출처: 블룸버그)

최근 GVC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품목 및 산업

	주요 품목	파급산업
러·우 전쟁	에너지, 원자재	전산업
	부품·소재, 철강	자동차, 반도체, 건설
	곡물, 유지류	식료품, 서비스
중국 봉쇄	완성차, 차량용 부품, 전자부품, 건설자재	자동차, IT, 건설
미·중 갈등	반도체 장비부품,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6

1-2.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방향

위기 선제 대응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 “125조원+0” 금융 민생안정 대책 ✓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방안 추진	금융시장 안정 ✓ 일시 애로기업 유동성 지원 ✓ 주식·채권· 외환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 유동성 및 손실흡수 능력 제고 유도 ✓ 취약금융회사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 민간부문 지원		
미래 성장 지원	금융규제 혁신, 디지털化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디지털자산 성장	자본시장 도약 자본시장 체질 개선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적절한 정책금융지원 민간중심 모험자본 육성
	① 혁신과 소비자보호/금융안정 균형 ②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③ 체감과제 우선 추진		

7

2

위기 선제대응

- 01 취약부문 금융대책
- 02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 03 가계부채 관리방향



2. 위기 선제대응 – 취약계층 금융 대책

가계 주거관련 부담 경감

✓ 주택관련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 → 고정금리, 45조원)
- 대출 최장만기 연장

✓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 저리의 정책 전세대출 한도 확대(2 → 4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상환부담 경감중심 재무구조 개선

- 새출발자금 부실우려채권 매입 채무조정(30조원)
- 고금리 →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8.7조원)
- 리모델링 · 사업내실화 자금 지원(42.2조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만료(9월말) 대비 보완장치



취약계층 지원

✓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조정

- 연체 이전 이자감면 · 상환유예 지원(원금탕감 x)

✓ 정책 서민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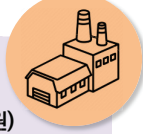
- 금년중 10조원 공급



중소기업 애로 지원

✓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공급(6조원)

- ✓ 원자재 수입/글로벌공급망 애로기업 지원
-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 ✓ 신용위험 평가로 사업구조 개선/채무조정



2. 위기 선제대응 -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 비상대응 점검체계 운영 중 ⇨ 금융시장 · 금융회사 모니터링, 필요시 적시 대응

- 상시 금융시장 점검 : 시장동향 일일점검('22.2월초~),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22.7.1.~, 매주/금융위·원+유관기관)
- 금융리스크 대응 TF : 금융시장·산업의 리스크 요인 점검·대응('22.5.18.~, 매월/금융위·원 · 예보+유관기관·민간전문가)

시장 변동성 완화

✓ 불안심리 확산 차단 & 시장안정 조치

- 시장상황 모니터링 → 적시 시장안정 메시지
- 필요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변동성 완화조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확대 (각각 '22.7.1일, 7.13일 발표)
- 비상 상황 대비 컨틴전시 플랜 마련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 리스크 점검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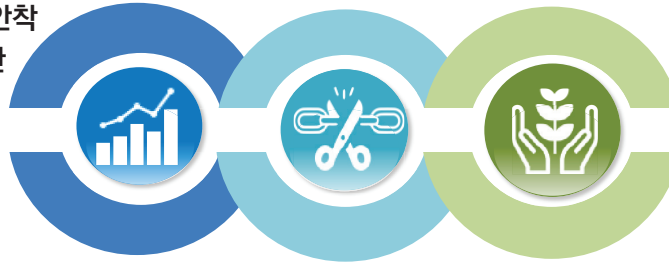
- 업권별 (유동성·건전성)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취약요인 점검
- 금융회사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여력 강화 및 부실예방·위기전염차단 위한 지원체계 신설*
- * 예보기금내 금융안정계정(案)을 신설하여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

2. 위기 선제대응- 가계부채 관리 방향

- ◆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 ◆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01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DSR 3단계 안착
- ✓분할상환 확산



03 취약차주 상환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출 공급(45조원)
- ✓대출 최장만기 연장
-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확대

02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생애최초 LTV 80% 완화
- ✓DSR 장래소득 인정 확대
- ✓주담대 처분 · 전입조건 완화

7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 01 금융규제 혁신
- 02 디지털 자산 책임있는 성장
- 03 자본시장 도약
- 0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1) 금융규제 혁신

선도적 플레이어
양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1.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한 등 규제 개선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 완화



2.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금융/비금융/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금융분야 AI 활성화



3. 감독 및 검사관행 개선

- 행정지도 재검토 및 정비
- 제재 상대방의 이의신청 내실화 등 반론권 보장



4.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금융자본 유치 및 국내금융 해외 진출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2) 디지털자산 책임있는 성장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의
균형 모색



1.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가상자산 유형에 따른 법정비
-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규제정합성 확보



2. 사업자 감독 및 소비자 보호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FIU 검사/감독 강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
- 업계의 자정노력 유도



3.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 지원

-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
-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3) 자본시장 도약

**1,000만 투자자와
함께하는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



1.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 물정 분할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 대주주 등 주식처분계획 사전 공시
- 공매도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 상장폐지 요건/절차 세분화
- 제재조치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
- 증권범죄 대응 강화



2.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
- ESG 공시기준 마련
-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3. 위기를 넘어 재도약

(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미래 전략산업 집중투자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1. 정책금융의 적절한 역할

-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 시장 보완부문 집중
- 디지털, 초격차 등 미래핵심분야 집중
-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참여 투자펀드 조성



2. 민간 중심 모험자본 육성

-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
-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으로 일반 투자자의 유망 비상장사 투자기회 확대
- 혁신 벤처기업의 적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공모 규제 합리화

4

기타 국정과제

- 01 청년 자산형성 지원
- 02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
- 0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4. 기타 국정과제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 청년 도약계좌 도입 추진
- * 예산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방안 발표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

- ✓ 맞춤형 펫보험 상품 출시 추진
- ✓ 모바일 OTP 사용 확산 추진
-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 금융권 내부통제 방안 마련
- ✓ 금융사고 방지

감 사 합 니 다

[발표 1]

IBK기업은행: 국책은행 역할 평가 및 시사점

2022. 8. 12.

윤 종 원
(IBK기업은행 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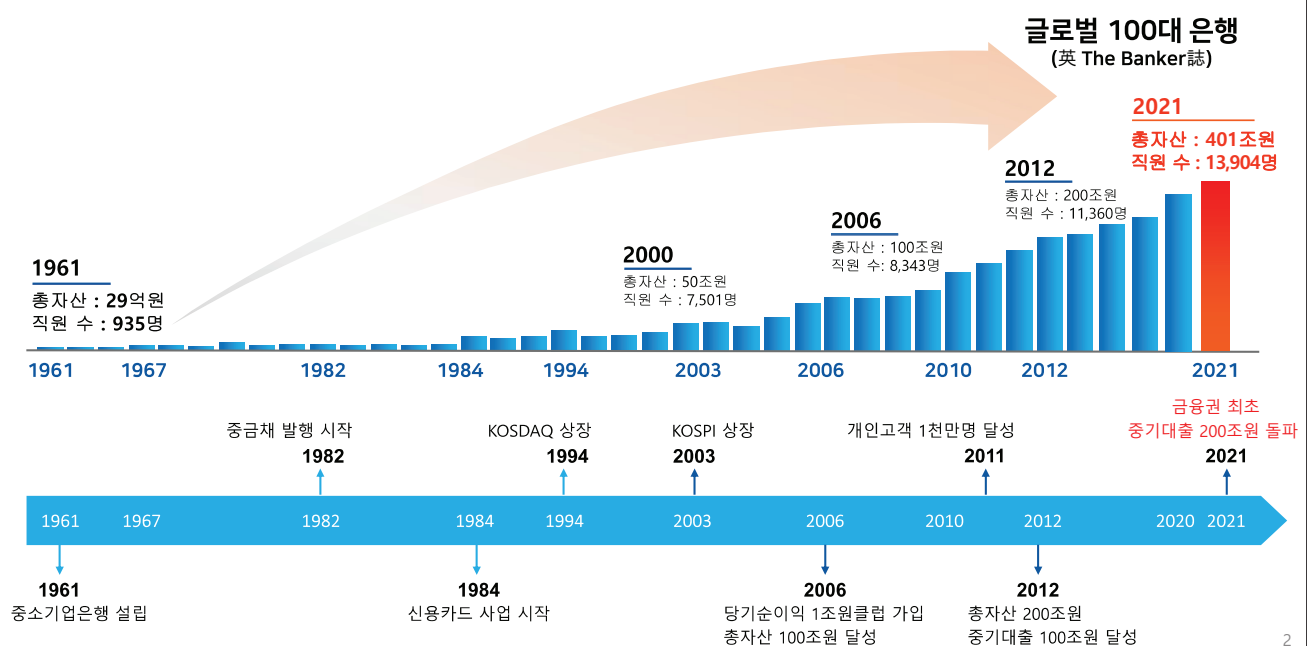
IBK기업은행: 국책은행 역할 평가 및 시사점

2022. 8.12

IBK기업은행장 윤종원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 Special Policy Session: 혁신 성장과 금융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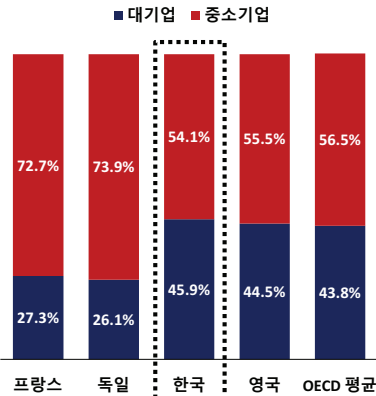
IBK since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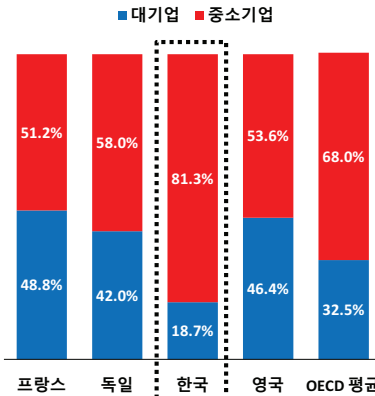
중소기업 현황

OECD 국가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낮으나 **종업원 수**, **은행대출 비중**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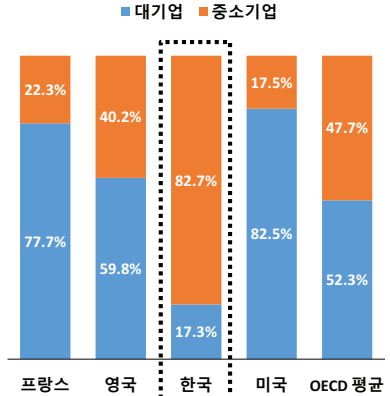
부가가치 비중



종업원 수 비중



은행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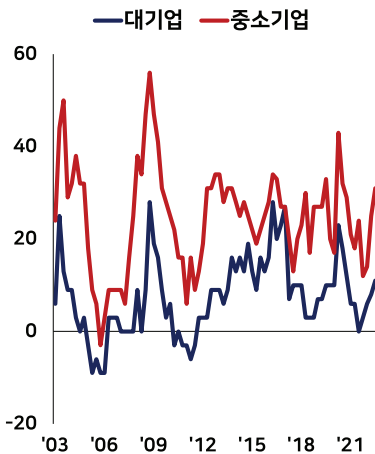


주: (부가가치 및 종업원 수 비중) 한국은 2020년, 영국은 2018년 나머지 OECD 국가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은 2018년 또는 2019년 통계가 존재하는 기업 (은행대출 비중) 한국은 '22.6월, 미국은 2018년, 나머지 OECD 국가는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준) OECD는 종사자 250인 미만, 한국은 매출액 기준
자료: OECD.Stat, 중소벤처기업부(한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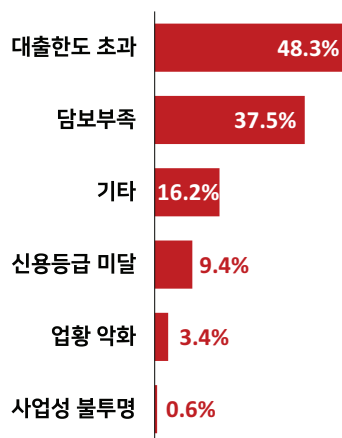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특성: 높은 신용위험, 취약한 담보력, 짧은 업력 등

신용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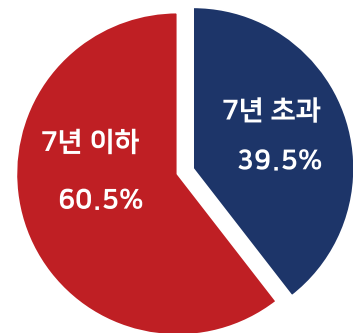
주: (+) 는 신용위험 증가, (-)는 감소
자료: 한국은행

은행 신규대출 거절 사유



주: '20년말 기준, 복수응답, 기타(기여도거래내역 없음, 소규모 기업)
자료: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IBK기업은행

업력별 비중



주: '20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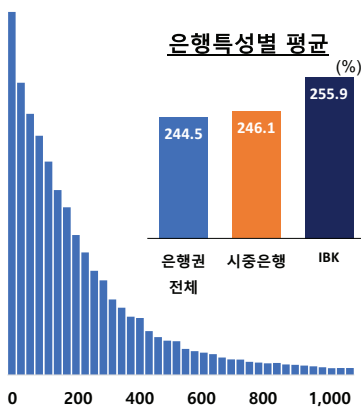
국내은행 및 IBK의 기업대출 차주 분포(2020년)

※ IBK 중소기업 고객 수: 206만개('22.4월 기준) / 전체: 729만개('20년 기준)

IBK 중기대출잔액: 210조원('22.4월 기준) / 전체: 917조원('22.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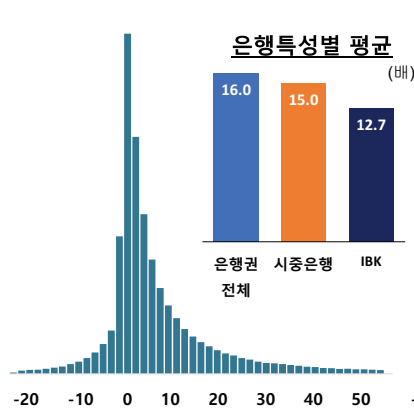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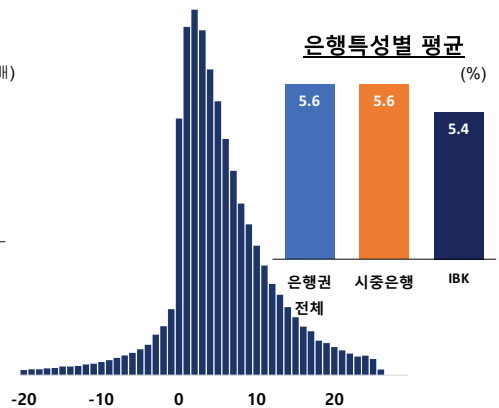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주: 국내은행=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씨티, SC), 특수은행(농협, 산협, 수출입, 수협, IBK), 지방은행(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20년 원화대출금과 재무정보 식별이 가능한 162,235개 기업 대상, 부채비율, 자기자본, 이자비용 0 미만, 매출액 0인 기업 및 지표별 상·하위 5%는 이상치로 간주하여 제외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평가데이터(KoDATA)

5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Literature survey)

· 위기 시 금융안전판 및 경기대응적 자금공급

- BIS(2008):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이 경기 변동 확대 및 금융불안 증폭 기제로 작용
- Brei et al.(2013): 금융위기 기간 민간은행 대출은 축소, 국영은행 대출은 확대
- Bertay et al.(2015): 국영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민간은행보다 덜하며, 지배구조가 좋은 국가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정보비대칭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 Stiglitz and Weiss(1981): 대출시장 내 정보불완전성으로 균형 상태에서 신용할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
- Burgess and Pande(2003): 인도 지방은행(국책) 확대가 경제·금융발전에 기여
- Behr et al.(2013): 국영은행 대출비중 증가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제약을 완화

· Big Push 등 성장 촉진

- Rosenstein-Rodan(1961), Murphy et al.(1989)
: 산업화 또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 또는 정부 주도 하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
- Gerschenkron(1962):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의 조건임을 제시

· 외부효과 시정 및 리스크 감수

- Baderscher et al.(2013): 산업 내 공기업의 존재가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
- Chen et al.(2021): 설문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화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부문의 역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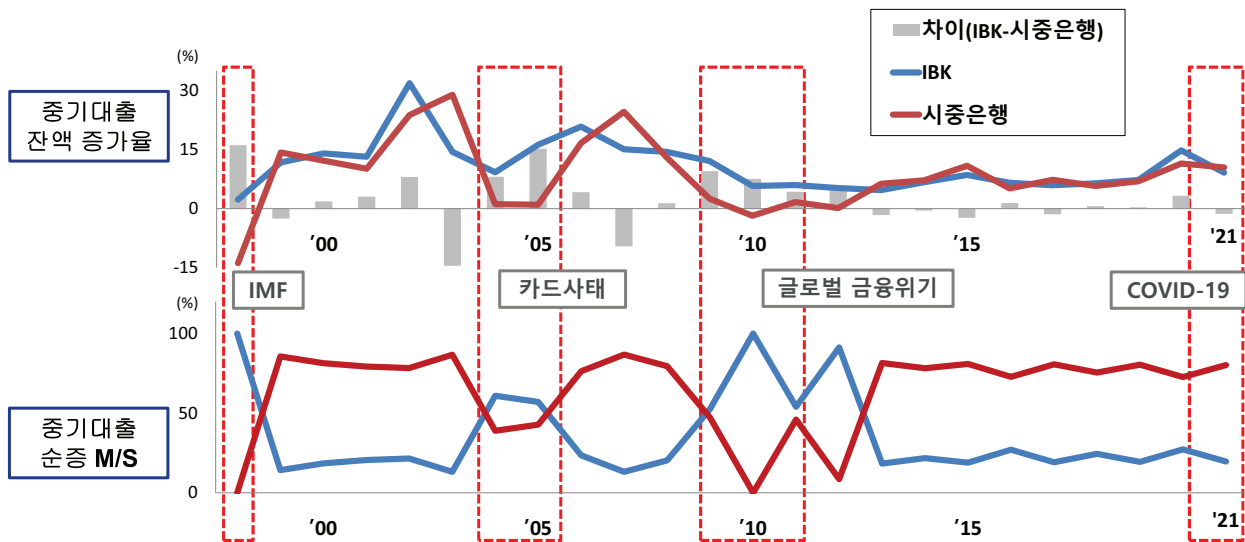
정보비대칭에 따른 금융시장 불완전성, 시장실패 보안을 위해 정책 개입 필요*(Stiglitz, 1994)

* 금융의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 투자자 정보 부족 등 7가지 금융시장 실패 유형 제시

6

IBK의 역할: ① 금융안전판

IBK와 시중은행의 위기 시 대출공급 비교



7

② 기업대출의 경기대응성: Pro- vs Counter-cyclical?

대출의 경기민감도(β_2)

$$\Delta Loan_t = \beta_0 + \beta_1 \Delta Loan_{t-1} + \beta_2 \Delta GDP_t + \beta_3 D_t + \varepsilon_t$$

시중은행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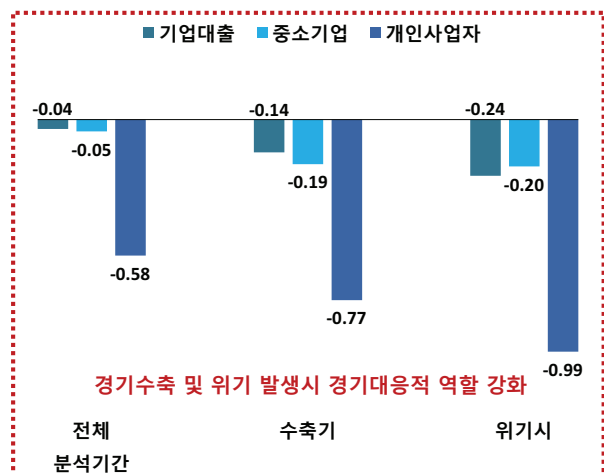
지방은행

0.24

IBK

-0.18

경기대응성



주: 분석기간 '99.3분기~'21.4분기, 은행대출(종속변수)과 GDP(설명변수)는 실질화·계절조정 후 로그변환, D_t 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09.1분기 이후) 더미, 자료: IBK기업은행

8

③중소기업 금융접근성: IBK vs 민간은행

은행특성별 중소기업 대출행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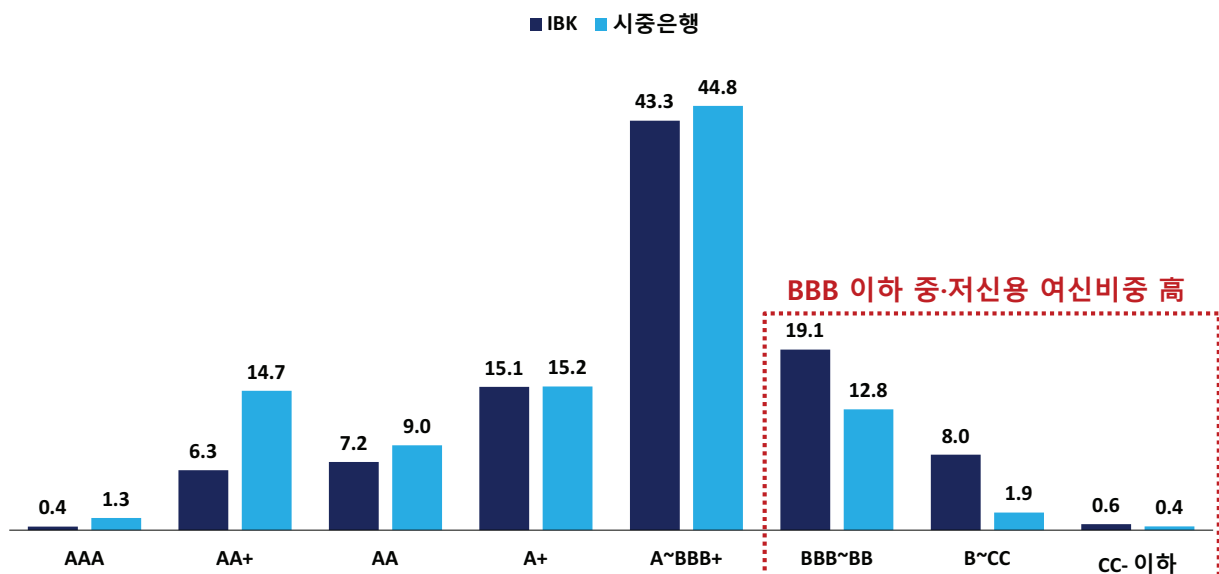
$$Y_{i,t}^k = \alpha + \sum_{j=1}^J \beta^j X_{i,t}^j + T_t^{2020} + \sum_{j=1}^J \gamma^j X_{i,t}^j T_t^{2020} + \varepsilon_{i,t}$$

관측치 수: 519,591 주요 설명변수($X_{i,t}^j, X_{i,t}^j T_t^{2020}$)		종속변수($Y_{i,t}^k$): 중소기업 대출잔액		
		IBK	시중은행	지방은행
위기 이전 대출행태 (β^j)	총자산	0.847***	0.598***	0.218***
	업력 7년 이하	-0.015	-0.119***	-0.062***
	중·저신용	0.718***	0.456***	0.286***
T_t^{2020}	2020년 Covid-19 더미	0.955***	0.613***	0.176
위기 이후 대출행태 변화 (γ^j)	총자산 x 2020년 더미	-0.067***	-0.010	-0.022***
	업력 7년 이하 x 2020년 더미	0.121***	-0.026	-0.045***
	중·저신용 x 2020년 더미	0.050*	-0.160***	-0.009

주: 분석기간은 '17~'20년, 종속변수는 은행연합회의 국내은행(k) 중소기업 차주별(j) 대출잔액, 설명변수 KED의 기업일반, 신용등급 및 재무정보,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ROA, 부채비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은 통제변수,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IBK기업은행

9

③-1 금융접근성: 신용등급별 여신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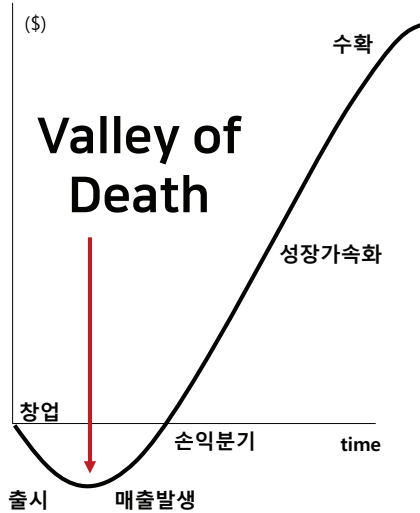


주: '21년말 기준,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자료: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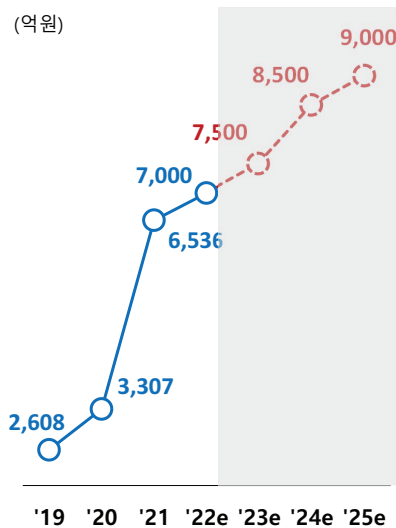
10

③-2 금융접근성: 창업·벤처기업 지원

창업기업 성장경로



모험자본 공급액



자료: IBK기업은행

IBK창공 육성기업수



11

④ 정보비대칭 완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 IBK BOX 등



기업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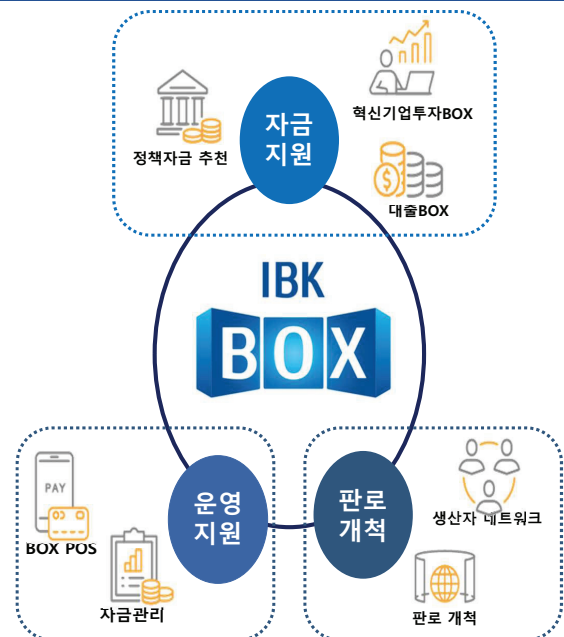
- 데이터 자동 수집
- 종합 진단 및 분석

맞춤처방

- 맞춤 금융상품 안내
- 맞춤 서비스 안내

연계지원

- 유형별 컨설팅 제공
- 금융·비금융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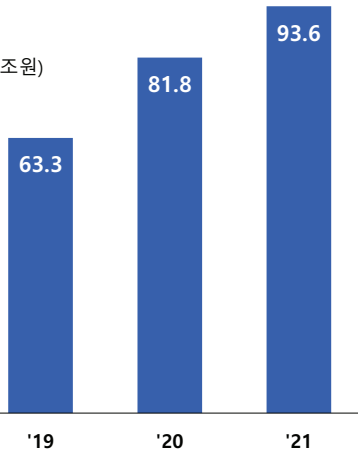
12

⑤외부효과 시정, 리스크 감수: 혁신성장 지원 등 정책 목적

기술금융

기술금융대출잔액

(조원)



자료: IBK기업은행

문화콘텐츠 투자



녹색·ESG 전환

IBK ESG가이드 및 컨설팅



OECD 지속가능 중소기업금융 플랫폼



13

Policy consideration

✓ Mandate

- Policy objective matters
- Clear roles & responsibilities

✓ Modality

- 온렌딩 vs 시장경쟁형 기관
- Policy effectiveness, 시장왜곡, 재정부담 등 고려

✓ Operational autonomy

- 규제 및 감독의 적정 수준

14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직원 1명이든 1000명이든 기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막대한 일입니다.
자원은 많고 돈이 내세울 만한 실력,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 해도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은행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업의 대 중 소 사이로가 좁아지지 않은 시대
여기,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원!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감사 합 니 다 -

[발표 2]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2022. 8. 12.

강 석 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2022년 8월 12일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 석 훈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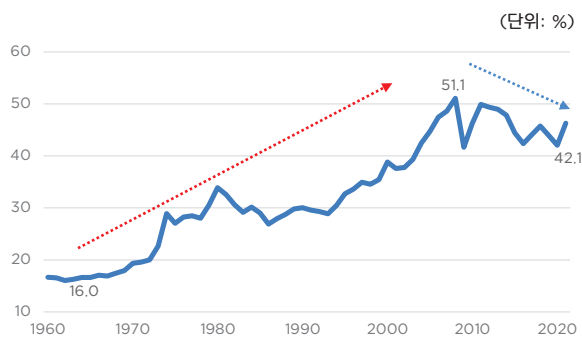
- 01 | 대한민국, 갈림길에 서다
- 02 | 정책금융의 역할
- 03 | 산업은행, 혁신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1. 대한민국, 갈림길에 서다

1.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1/2)

• 탈세계화와 경제안보의 시대, 험난한 길에 접어든 대한민국

세계 GDP대비 무역 비중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DP대비 수출 비중(% , '20년 기준)
- 한국 36.4%, 미국 10.2%, 일본 15.6%

가치 중심의 이익분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22.8월)



- 반도체 기업의 미국내 신규 투자시 보조금 지급
- 수혜기업의 중국 및 비우호적 국가 '내 시설 확장 금지'

NATO의 新전략개념 ('22.6월)



-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 EU의 對중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대두

러시아-중국의 경제협력



-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및 對중국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세계화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

1.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2)

• 산업구조 대전환,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 대전환

디지털전환

-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글로벌 패러다임
- 디지털 기술의 단순 도입이 아닌 경영·생산·조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의미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간 융복합** 등 산업구조 전반의 재편을 유도

그린전환

- 파리기후변화협정('16년 발효) - '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
- '20년 모든 협정당사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을 완료
-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세계 주요기업의 RE100 선언 등 **탄소 중립은 글로벌 New Normal**로 정착

산업전략의 부활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 ('21.10월)
• 인프라 및 디지털 저변 확대를 위해 1.3조달러 투자



국가산업전략 2030 ('19.12월)
• 산업경쟁력 확보 및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제시



신 인프라 건설 ('20.3월)
• 통신, AI 등 7대 인프라 분야를 선정하고 2.1조달러 투자



유럽 그린딜 ('19.12월)
• 기후위기 대응하여 '30년까지 총 1조 유로 투자



그린에너지정책 ('20.7월)
• 탄소중립 달성 등 환경분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 투자



2050 탄소중립 전략 ('21.10월)
• 수소, 해상풍력, 원자력 등에 '37년까지 6,500억 파운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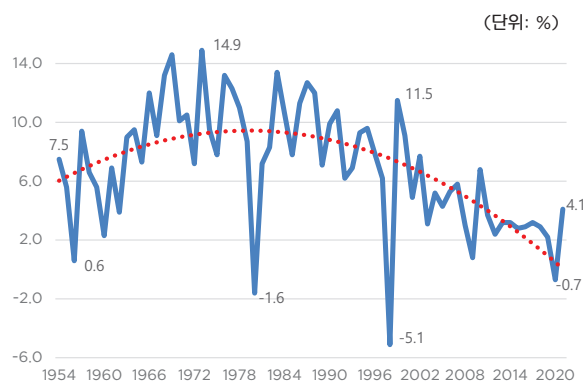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밀한 산업전략 수립이 필요

2

2. 한국경제 - 초저성장과 초고령 사회의 늪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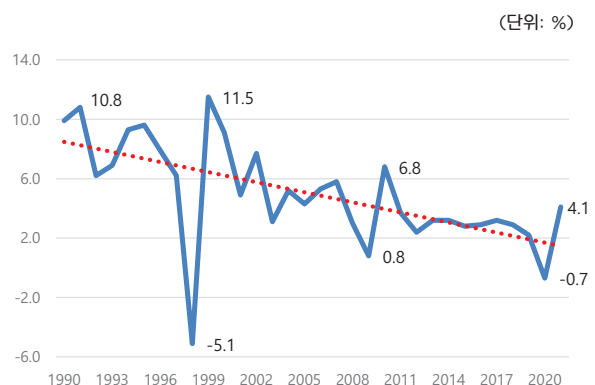
•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봄날'은 가고 저성장의 '겨울'이 오다

GDP 성장률 (장기시계열)



자료 : 한국은행

GDP 성장률 ('90년 이후)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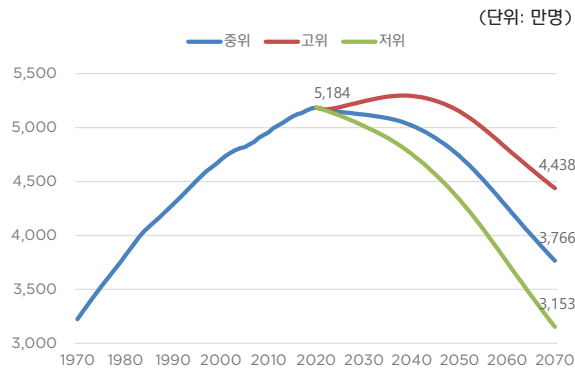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

3

2. 한국경제 - 초저성장과 초고령 사회의 늪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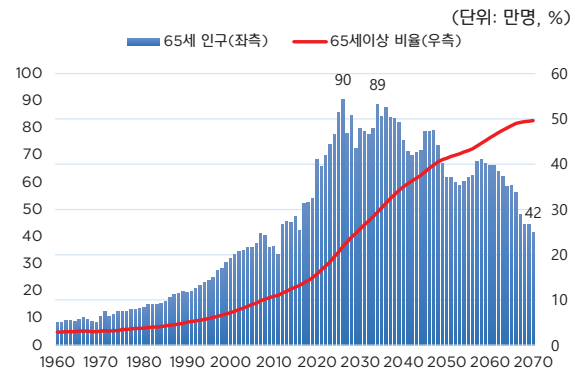
• 인구감소, 2067년 인구 = 1972년 인구 ?

장래 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65세이상) 추계 (저위추계 기준)



자료 : 통계청

미래의 대한민국은 청년의 활력이 사라진 노인 중심의 사회

4

2. 한국경제 - 초저성장과 초고령 사회의 늪 (3/3)

• 잠재성장률 '0.8%'의 경고와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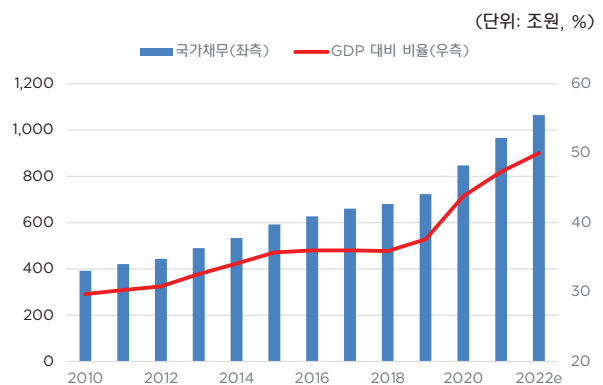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00 - 2007	2007 - 2020	2020 - 2030	2030 - 2060
France	1.0	0.7	0.9	1.2
Italy	0.3	△0.2	0.7	1.2
Japan	0.5	0.7	1.0	1.1
US	1.5	1.1	1.2	1.0
Germany	1.2	1.1	0.8	0.9
UK	1.5	0.7	0.8	0.9
Korea	3.8	2.8	1.9	0.8

주: 1인당 잠재GDP 성장률
자료 : OECD(2021)

국가채무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재도약과 초저성장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앞으로의 10년이 중요

5

2. 정책금융의 역할

1. 경제안보 대응 – 기술주권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초격차 기술 및 소·부·장 산업을 금융측면에서 지원

초격차 기술 지원

• 기존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한 **대규모·장기 금융지원**

- 예시) 2차전지 기업의 투자액 (공시기준)
- LG에너지솔루션 '30년까지 15조원 ('21.7월)
 - SK온 총 23조원 투자 ('22.4월)

• 새로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모험자본 공급**

-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전략기술
- 수소, 차세대원전,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소·부·장 산업 육성

• 주요 제품별 **Supply-Chain**에 기반한 **지원정책** 수립

- 제품별 Supply-Chain 체계 데이터 확보
- Supply-Chain에 기반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에 기여

•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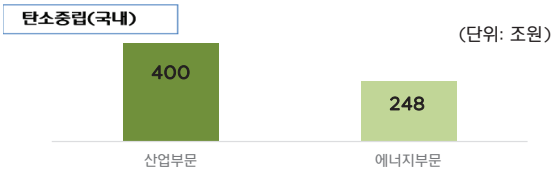
- Supply-Chain 상의 중요도, 기술수준, 수입의존도 등을 검토하여 핵심 기업에 대한 펀셋 지원
- 기업별 자금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자금을 대한 선제적 대응

보편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정책금융기관에 걸맞는 경제안보 대응 지원체계 제공

2. 산업구조 대전환 대응 – 전환투자 및 신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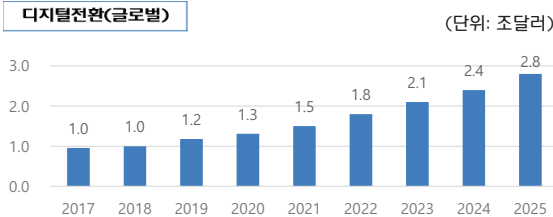
• 산업구조 대전환과 관련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비

산업구조 대전환 자금수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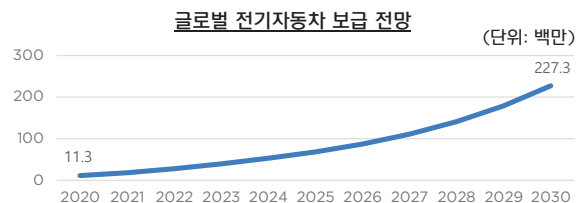
주 : '50년까지의 자금수요, 산업부문은 KIET, 에너지부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정

디지털전환(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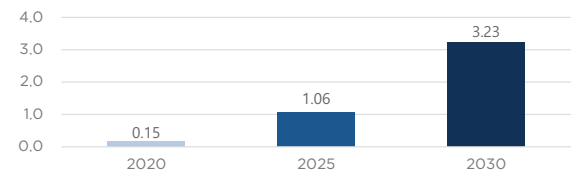


자료 : Statista

산업구조 대전환 관련 신산업의 성장 전망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 (단위: TWh/년)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환 수요는 재정 및 민간금융만으로는 자금수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7

3. 혁신기업 지원

• 경제성장의 주류 교체를 이뤄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 변화

(단위: 십억달러)

2010년				2021년		
1	Exxon Mobil	316	정유화학	Apple	2,913	통신기기
2	Microsoft	256	ICT서비스	Microsoft	2,525	ICT서비스
3	Apple	213	통신기기	Alphabet (Google)	1,922	ICT서비스
4	Wal-Mart	209	도소매	Amazon	1,691	도소매
5	Berkshire Hathaway	200	금융	Tesla	1,061	전기차
6	General Electric	194	전기전자	Meta	935	ICT서비스
7	Procter & Gamble	183	생활용품제조	NVIDIA	732	반도체
8	Johnson & Johnson	179	제약바이오	Berkshire Hathaway	668	금융
9	Bank of America	179	금융	UnitedHealth Group	472	헬스케어
10	JP Morgan Chase	177	금융	Visa	471	금융

한국의 시총 상위 기업 변화

(단위: 조원)

2010년				2021년			
1	삼성전자	193	반도체	삼성전자	467	반도체	
2	POSCO	42.5	철강	SK하이닉스	95.3	반도체	
3	현대차	38.2	자동차	NAVER	62.0	ICT서비스	
4	현대중공업	33.7	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59.7	제약바이오	
5	현대모비스	27.7	자동차	삼성전자우	58.5	반도체	
6	LG화학	25.9	화학	카카오	50.1	ICT서비스	
7	신한지주	25.1	금융	삼성SDI	45.0	전기전자	
8	KB금융	23.2	금융	현대차	44.6	자동차	
9	삼성생명	20.5	금융	LG화학	43.4	화학	
10	기아차	20.1	자동차	기아차	33.3	자동차	

여전히 제조업과 기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역할 필요

8

4. Deep Tech 육성

• Deep Tech는 장기·모험·인내 자본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

Deep Tech 산업의 개념과 특징

• 개념

-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며 시장 형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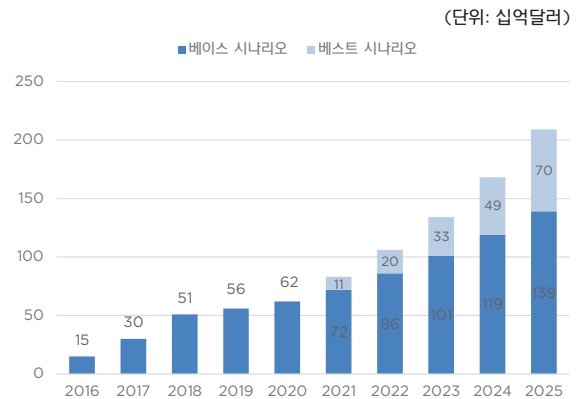
- 사업화 시 큰 임팩트
-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 소요
- 리스크가 높아 외부투자를 받기 어려움

• 주요 기술

- AI,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로봇, 합성생물학, 광자 등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Deep Tech 산업의 성장성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장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모험·인내자본 공급이 필요

9

3. 산업은행, 혁신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1. 산업은행, 새로운 변화

• 미래를 향한 산업은행의 준비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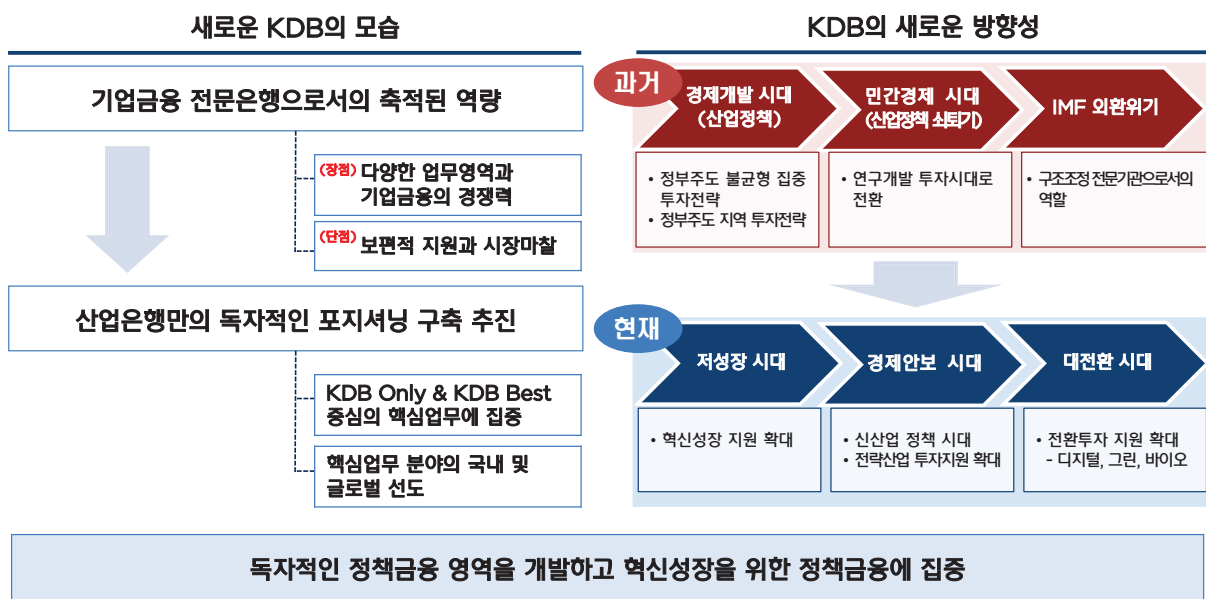
현재의 산은법	변화된 산은의 모습을 반영한 산은법(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개발 및 육성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개발 • 금융시장 안정 •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의 공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의 금융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선도 ●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산업 투자 선도 • 디지털 인프라 투자 선도 • 지역성장 선도 • 금융산업 경쟁력 선도 • ESG 등 지속가능투자 선도 ● 수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의 조달 및 공급, 관리

개발금융 시대의 산은을 벗어나 혁신성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은으로의 변화

10

2. 산업은행, 새로운 방향성

• KDB only & KDB best



11

3. 산업은행, 새로운 역할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은행의 핵심 역할

1 산업구조 대전환의 튼튼한 조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산업구조 대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위험분야에 자본 공급● 산업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부상하는 신산업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지원
2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일으키는 혁신성장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부터 스케일업, 글로벌 유니콘까지 혁신기업의 중단없는 성장을 지원하는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3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Think T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주권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의 초격차 확보 및 소·부장 산업 육성 지원● 산업별 Supply Chain에 기반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자금 공급 및 성공적 산업정책 수립 지원
4 시장안정을 지원하는 준비된 정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적된 위기대응 역량을 통해 경제·금융위기 도래시 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구조조정 방안 추진
5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지역발전의 금융센터●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개발금융 역할 주도

12

감사합니다

